

# 포스코건설 동해항 북방파제 공사 수주

1,465억원 규모 1,000m 방파제 신설 담당 - 6월 착공 예정

포스코건설이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2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등해지방해양수산청이 조달청을 통해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로 1,000m 방파제를 신설하는 2공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700m 방파제를 신설하는 1공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2공구는 현대건설, GS건설, 금호산업 등 항만 분야 강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와

올해 기술형 입찰시장을 통틀어 유일한 4파전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사업으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수주에 성공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타사와 달리 케이슨과 사석을 혼용해 방파제를 건설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45%), 동부건설(15%), 포스코엔지니어링(15%), 도원이엔씨(12%), 영진중건(8%), 여운(5%)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465억원 규

모로 오는 6월 착공할 계획이다.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는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중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첫 단추로 방파제 1,700m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편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조6,224억원을 들여 최대 10만톤급 접안시설 7선석, 방파제 1,850m, 방파호안 2,300m 등이 건설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4,10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된다.

동해=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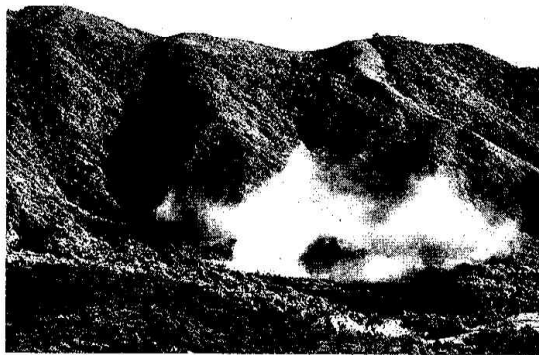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군수가 밝힌 지역현안 /

## 양구~원통 국도 직선화·사격장 이전

### 양구군

양구군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으로 양구~인제 원통 간 국도 31호선 직선화 개량사업을 비롯해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 가오자터널 개설, 남면 두무리 도로 직선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 문제와 함께 도로 직선화와 터널 개설 등 SOC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구~인제 원통 간 국도 31호선 직선화 개량사업은 양구 뿐만 아니라 춘천시, 인제군 등에도 필요한 현안이다. 양구군 남면 광치 삼거리~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잇는 26.1km 구간은 노푀이 좁고 굴곡이 심해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대 훈련 기간 장비가 이동하면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비 깨리는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 남면 봉화산 태풍사격장.

###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조기 착공” 촉구 봉화산 태풍사격장 피해대책...터널개설 등 SOC 확충

군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2016~2020년)계획에 반영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하고 있다.

양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최대 현안이다. 봉화산 태풍사격장이 남면 대월리, 구암리, 심포리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훈련에 따른 소

음, 주택 균열, 가축 피해 등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 최근 무기의 대형화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격장 이전을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봉화산 사격장 일원은 생태관광지 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개발 제한으로 지역 발전에도 결

림들이 되고 있다.

양구읍 죽곡리와 남면 가오자리를 잇는 군도 3호선 가오자 고개의 터널 개설 사업도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겨울철이면 노면이 얼어붙어 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아 터널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남면 장리~두무리를 잇는 고개에 터널과 연결도로를 개설해 직선화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 구간도 역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농민들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직선화 사업이 시급하다.

전창범 군수는 “지역 간 접근성 확보와 낙후된 접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양구=심은석기자

# 화천읍 200억 투입 LPG배관망 9월 착공

**30여km 설치 본격화** 로 기존 LPG 용기 충전보다 30~50% 저렴하고 난방 시에는 등유 보일러보다 20% 이상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 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 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최은순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획기적 으로 절감하고 안전성을 강화하 겠다"고 했다. 정래석기자

**[화천] 화천군은 'LPG 배관망 구 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 업 추진 과정을 공개한다. 총 사 업비 200억원을 들여 9월부터 공 사를 착공, 내년 10월까지 화천읍 일원 LPG 저장탱크와 30여km의 배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은 지하에 매설하고 위급상황 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계량기와 가스누설 경보 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 하기로 했다. 가스 배관망 공급으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시장이 밝힌 지역 현안 /

## 동서고속도 제천~삼척구간 착공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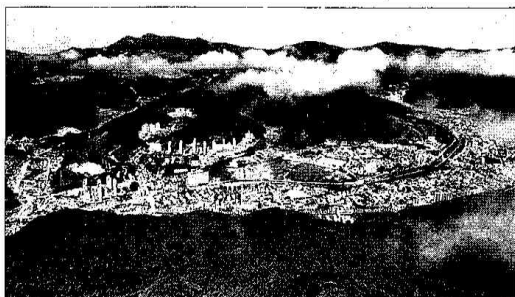
### 태백시

태백시는 제20대 국회의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충북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손꼽았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유보금 폐광지역 투자와 소도지역 정수장 통합, 폐광지역 국도관리권 이관을 위한 도로법 개정, 나라사랑 화관 건립 등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동서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안성 간 25.8km가 2002년, 안성~음성 간 31.1km는 2008년, 음성~충주 간 45.4km는 2013년, 충주~제천 간 23.9km는 2015년 개통됐다. 하지만 강원남부권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 시설이 될 충북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123.2km는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시는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등 관광도시로 고속 발전되는 추세여서 서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고원 관광도시 육성에 탄력을 받은 태백시.

### 경기·충청권 개통 불구 강원권 기본계획조차 없어 국립공원 관광객 수요 증가 대비 인프라 구축 시급

해권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동서고속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염원은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제천시 등 7개 시군추진협의회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주민 5만여명의 연대서명서에 여실히 반영됐다.

강원랜드는 1998년 회사 설립 후 중앙정부에 국세와 관광기금 등으로 159조원가량을 남

부한 데 비해 폐광지역 등지엔 지방세와 폐기금 등으로 71조 원가량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정주 기반 재건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점에 비춰 보면 유보금 1조7,800억 원가량은 당연히 태백시 등지에 재투자돼야 될 상황이다.

당골정수장과 할리정수장 등 소도지역의 정수장들은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응집

시설 등 필요 시설이 없는 문제 점을 노출, 시설 통합을 통한 개선책이 보강돼야 한다.

산악지대인 태백은 동절기 제설 작업 등에 연간 43억원가량의 국도 유지비가 들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 해당 노선을 관리 중인 국토관리청에 관리권이 이관돼야 한다.

이를 위한 도로법이 개정되면 국토관리청에 국도 관리권이 이관될 도로는 329개 노선에 걸친 시내 도로 303.75km 중 3개 노선이 걸친 68.4km다.

보훈단체 등 10여개에 이르는 국가유공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선 '국비 지원금 등 27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320㎡가량인 나라사랑 화관이 건립돼 추진돼야 한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현안이 해결되면 고원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태백시의 발전이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백=장성일기자 sijang@

## 공사대금 체불업체 공개

### 도내 업체 135억원 체불

건설공사 대금을 자주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가 오는 9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될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체불한 임금은 총 245억6000만원이다.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공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한편 최근까지 도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2개 공사에 135억9000여만원으로 절반이상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서 발생했다.

안은복 rio@kado.net

# 하도급직불제 90% 이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 공정위 "직불 조건부 발주 등 극소수 그칠 듯"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 공공공사의 90% 이상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직불 조건부'나 '합의 직불' 발주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직불제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직불 유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대금e비로(서울시)' 등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두 번째는 대금지급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세 번째는 발주자·원급·수급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한 직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밝힌 대

로 올해 발주되는 34조2485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중 47%인 16조원 규모를 직불제 형태로 발주할 계획이며, 이 중 90% 이상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직불제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직불제 방식으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공사가 대금지급시스템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자가 계약체결 단계부터 원도급, 하도급, 노무·자재·장비 업체에 각자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각각에게 지급할 대금액, 지급 시기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된다.

이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원도급·하도급업체 등이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은행을 통해 대금을 각각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2차 협력자인 근로자, 자재, 장비업체까지 이런 시스템을 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직불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복잡미묘한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금지급시스템은 대부분의 공사를 복수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 운용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